

정보통신 일등국가를 향하여

- 2003년도 정보통신부 주요 정책방향 -



유영환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국 국장
yhy@mic.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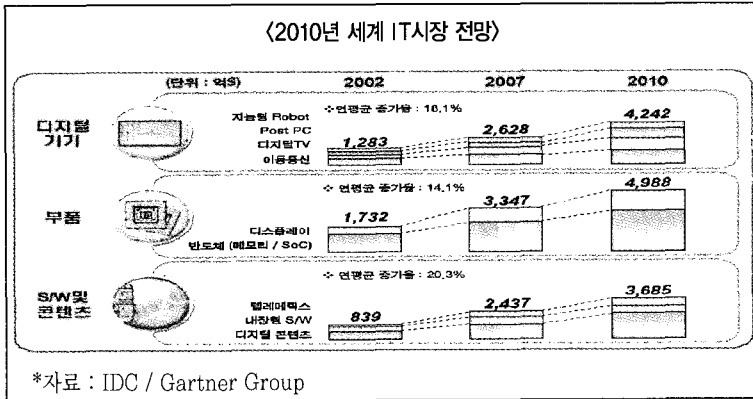
최근 우리 경제는 이라크전, 북핵문제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소비와 투자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어 향후 경기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 그리고,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온 국내 IT산업은 올 1·2월중에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24.5%의 증가세를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2000년 이후 계속되어온 세계 IT경기 침체가 금년도까지 이어지고, 사스(SARS)의 영향으로 올해 IT산업의 성장률은 둔화될 전망이다. 그렇지만 IT산업은 금년도의 조정기를 거쳐 내년도 이후부터는 차세대 성장산업들을 리드(Lead)하면서 향후 30년 이상은 세계경제발전의 중심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정보통신부의 2003년도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미래 국가성장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정보통신분야의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분명히 제시함으로써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을 주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IT산업 신성장 동력 발굴·육성

지난 5년간(1998~2002) IT산업은 외환위기 극복을 주도하고 전체 무역흑자의 71%, 실질 GDP 증가의 37%를 차지할 만큼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과 수출의 핵심동력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반도체, 컴퓨터 등 기존의 주력품목 성장률이 둔화되고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 또한 심해지고 있어 현재의 상태에 안주할 경우 향후의 우리나라 IT산업과 국가경제의 미래가 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IT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원천을 시급히 발굴·육성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중이다.

세계 IT시장은 2002년도의 1조 6천억불에서 연평균 6.7%로 성장하여 2010년에는 2조 7천억불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IT산업은 향후에도 세계경제 성장



수요를 바탕으로 세계시장을 선점해 나가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이에 디지털 TV방송은 전국망을 2005년까지 완성하고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과 2GHz 대역 3세대 이동통신서비스를 금년 내에 실시할 것이다, 세 번째는 IT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기반 조성에도 역점을 기울일 것인데,

의 중심이 될 것이며 기존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핵심 수단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새로운 성장원천은 IT분야에서 찾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고 파급효과 역시 클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국내외 IT산업을 분석하여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고 고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를 신성장동력으로 발굴하였으며, (1) 디지털 기기분야에서는 이동통신, 디지털TV, Post PC, 지능형 로봇, (2) 부품 분야에서는 디스플레이, 시스템 온 칩(SoC) 등 신개념 반도체, (3) S/W 및 콘텐츠 분야에서는 디지털콘텐츠, 내장형 S/W, 텔레메틱스를 중점 육성할 계획이다.

계획수립 단계부터 민간이 참여하고 집행과정에서는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범국가적인 추진체계 형성을 위하여 「IT신성장동력발전전략 추진위원회(위원장 : 정통부 장관)」을 구성하고, 품목별로 육성전략을 확정한 후 민관의 IT역량을 결집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그 기본방향은 첫째, 기술선도형 Flagship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할 것이다. Post PC시대에 대비하여 융·복합 기기와 부품을 개발하고 통신과 컴퓨터, 정밀기기와 S/W의 결정체인 지능형 Robot을 개발하여 산업화해 나갈 것이다. 두 번째는 차세대 통신 및 방송서비스를 조기에 도입하여 국내

핵심 기술개발과 창의적 전문인재 양성, 국가 R/D 시스템 정비 및 외국 일류 연구소 유치를 중점 추진하고, 국가 IR 활동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같은 IT신성장 전략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2007년도에는 IT생산 규모가 지금의 189조원에서 400조원으로 증가하고, IT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4.9%에서 20.0%로 높아지며 IT관련 고용 규모도 150만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수출 규모도 지금의 463억불에서 1,000억불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혁신적인 전자정부 구현

그 동안에 정부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주민, 부동산, 자동차 등 주요 행정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조달, 특허, 통관 분야의 정보화는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국민과 기업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는 시작 단계로서, 데이터베이스간 연계가 미흡하여 아직까지 만족스러운 원스톱(One-stop) 온라인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온라인으로 처리되는 민원 수도 전체민원의 1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정보통신부는 앞으로 “부처간 경계가 없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구현을 모토로 행정업무

의 처리절차를 국민의 입장에서 재설계하고, 각 부처별로 관리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간의 상호연계 활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안방민원시대”를 정착시키기 위해 2006년까지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완성하고,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대국민 근접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용 통합 행정서비스시스템(G4B)을 구축하고 관세, 철도, 항만정보를 연계한 종합물류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의 정보화 추세가 “부처별 단위업무 중심”에서 “부처간 시스템의 통합·연계” 단계로 발전함에 따라 다수부처 관련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보화 추진체계가 요청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보화전략회의(의장 : 대통령)와 정보화추진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등 정보화추진체계를 보다 강력하고 전문성있는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IT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국내 IT중소·벤처기업은 전체 IT생산의 25.9%, 수출의 27.2%, 고용의 52.5%를 담당하고 있는 등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하여, 20인 이하 기업이 68%, 10억원 이하 매출 기업이 60%에 달하는 등 규모가 영세할 뿐만 아니라 핵심기술과 마케팅 능력이 부족하고 업체간 차별화·분업화가 미흡하여 동종 사업 내에서 과당 경쟁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들이 있다.

이에 비해 대만의 IT중소기업은 전문화된 기업간 협업이 활발하고 공동구매와 지적재산권의

공동활용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산·학·연간 긴밀한 공동체제 구축으로 주요 IT제품의 세계시장을 60% 이상 점유하는 등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통부는 이러한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IT중소벤처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핵심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우선 창업보다 건설 성장을 위주로 지원정책을 전환하여 현행 창업지원제도를 정비하고 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기업간 협업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동구매, 공동콜센터 설치·운영 등 기업간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대기업과의 보완적 협력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IT중소벤처사업의 핵심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대학교·출연연구소의 기초연구 결과를 중소·벤처기업이 상용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IT인력이 제때에 공급될 수 있도록 IT인력 수급의 불균형문제를 해소하는 데에 역점을 둘 것이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IT중소·벤처기업이 2007년에 생산 110조 원, 수출 310억불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터넷 침해방지 등 정보통신망 보호대책 추진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인터넷 침해사고는 공격



유형이 개별시스템에 대한 공격에서 네트워크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바뀌고, 피해범위가 국지적·개별적 피해에서 전국적·광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금년초 1.25 인터넷망 침해사고에서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피해가 컸던 이유는 ①종합적인 네트워크 감시 체계가 없었고 ②기관간 정보공유도 미흡하였으며, ③국내에 인터넷 주소를 안내하는 최상위 도메인 네임 시스템(Root DNS)이 없었던 점을 들 수가 있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④우리 기업들의 정보보호 투자가 외국에 비해 저조 하고, ⑤국민들의 정보보호 의식이 낮은 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망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 구축을 통한 네트워크 상의 이상트래픽 상시 감시체계 정착, ISP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및 현장 조사권 도입을 통한 신속한 대응체계 정립 등 정보통신망 보호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인터넷쇼핑몰 등 다중이용 시설을 대상으로 정보보호시스템 안전기준 준수를 의무화하고, PC의 경우에는 출고단계에서 백신프로그램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주요 ISP의 네트워크 보호를 위한 투자를 유도하고 정보화사업에 적정 규모의 정보보호투자를 보장하도록 하여 정보보호기반을 대폭 강화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을 통하여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시 30분 이내에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국가사회 전반의 정보보호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킬 계획이다.

정보통신부는 앞에서 설명한 정책내용 외에 2GHz대역 3세대 이동통신서비스 도입 방안과 인터넷게시판 실명제, 불법 스팸메일 방지대책 등 정보통신분야 쟁점 현안과제에 대해서도 정책방향을 정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3세대 이동통신서비스의 연기·축소 논란에 대해 정통부는 차세대 이동통신산업의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

면서 통신사업자의 투자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 아래 서울 지역은 당초 계획대로 올해 안에 3세대 서비스를 개시하도록 하고 전국 확대는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사이버상의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터넷게시판 실명제 실시는 네티즌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공공기관부터 우선 도입하도록 하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불법 스팸메일 방지를 위해서는 서버 차원에서의 차단방안 강구,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악성 스팸메일 전송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적극적인 시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2007년 IT정책 비전

지금 우리나라는 대다수 국민이 경제사회 활동에 IT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정보화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IT산업 또한 우리경제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화, 정보화, 디지털화 등 세계사적 대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정보화와 IT육성을 더욱 굳은 각오로 추진해가야 하는 시점에 직면해 있다.

정보통신부는 이러한 시대사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여 “지식정보화의 전면화로 국민 참여사회 구현”, “IT를 통한 변화와 개혁의 촉진” 및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IT 신산업 창출”을 미션(Mission)으로 설정하고 2007년까지 온 힘을 기울여 추진함으로써 정보통신일등국가를 조속히 달성하도록 할 것이다.

김재관 편집위원장 jkwankim@plaza.snu.ac.kr